

制度·政策研究資料 9101

經濟懸案과 政策에 대한
國民輿論調查

1991. 1



국경연 국민경제제도연구원

經濟懸案과 政策에 대한
國民輿論調査

1991. 1

國民經濟制度研究院

빈 면

目 次

I. 조사목적	3
II. 조사내용	3
III. 조사방법 및 절차	4
IV. 분석결과	
1. 경제전망 및 과제	6
2. 물가문제	14
3. 주택문제	20
4. 부동산문제	25
5. 노사문제	29
6. 우르과이라운드문제	35
V. 요약 및 결론	40

비명

I. 조사목적

우리 경제는 물가, 주택 및 부동산 문제, 무역수지, 우르콰이라운드 협상, 노사관계 등이 주요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급격한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월 새로 입각한 경제팀은 4월부터 일련의 대책들(4.4 경제활성화대책, 4.13 부동산대책, 5.8 보완대책 등)을 발표하고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경제시책을 일신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천작업에 들어갔다.

본 조사는 우리의 경제·사회의 주요현안들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평가 및 기대 등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수립과 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조사내용

본 조사에서 다루어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전망 및 과제

- 1)향후 10년간의 경제발전에 대한 전망
- 2)경제성장 둔화이유
- 3)1년후의 무역수지 상태 전망
- 4)무역수지 적자 전망 이유
- 5)가장 심각한 경제현안
- 6)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문
- 7)바람직한 경제운영방안
- 8)향후 유망산업

2. 물가문제

- 1)1년 전과 비교해 가장 오른 물가항목
- 2)1년 전과 비교한 저축비율 증감여부
- 3)정부가 노력해야 할 물가정책

3. 주택문제

- 1) 200 만호 주택건설 진행평가
- 2) 200 만호 건설 후의 주택구입 용이성 평가
- 3) 임대주택 건설의 저소득층 주택난 해결 평가
- 4) 중산층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기간
- 5)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견해

4. 부동산문제

- 1) 1 년 후의 지가상승폭
- 2) 미등기 전매의 형사처벌과 부동산투기자 명단의 언론공개가 부동산투기억제에 주는 효과
- 3) 종합토지과세제도에 대한 인지정도
- 4) 종합토지과세제도가 부동산투기 진정에 미치는 효과 평가

5. 노사문제

- 1) 노사분규 감소 원인
- 2) 근로자들이 바라는 사항
- 3) 근로의식 약화 주장에 대한 견해
- 4) 근로의식 약화원인

6. 우르과이라운드 문제(UR)

- 1) 우르과이라운드 인지여부
- 2) 우르과이라운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 3) 농업발전을 위한 방향

Ⅲ. 조사절차 및 방법

1. 조사기간: 1990년 11 월 16 일-11월 30 일 (15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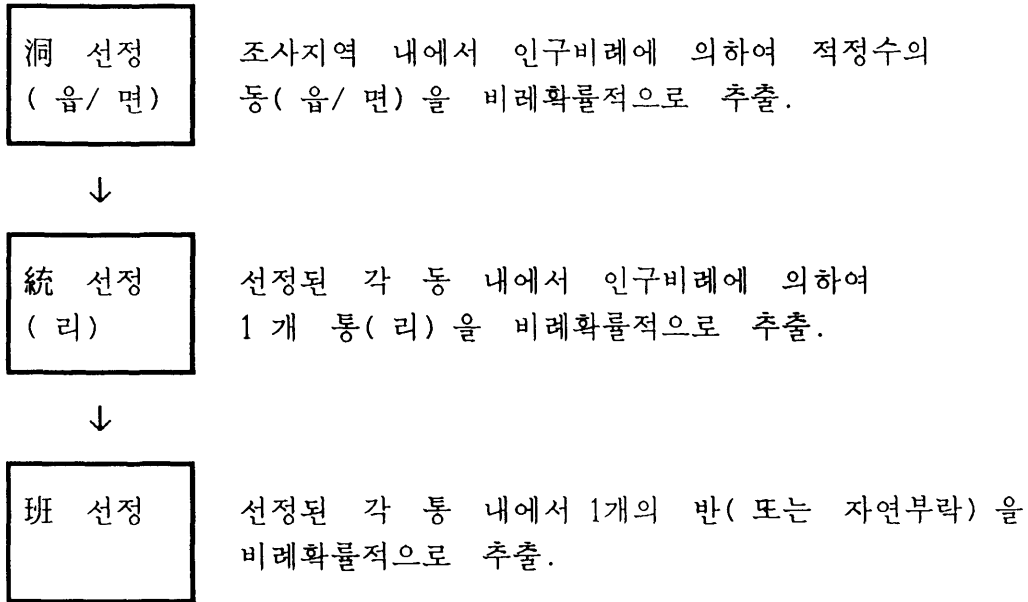
2. 자료수집방법: 가구방문에 의한 1 대 1 개별면접

3. 표본추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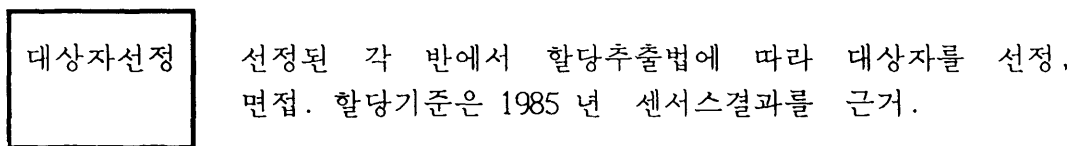
- 1) 모집단: 만 20 세 이상의 성인 대상
- 2) 조사지역: 전국(제주도를 포함)

3) 표본추출방법: 多層集落 抽出 및 割當抽出 병행 실행

(1) 1 단계 표본추출: 조사지점 추출을 위한 多層集落 抽出法



(2) 2 단계 표본추출: 응답자 선정을 위한 割當抽出法 (고려변인: 성별, 연령)



4. 표본크기: 1,500명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2.5\%$ (95%신뢰도))

5.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1) 조사대행 및 자료입력기관: (주) 전국종합신용평가 부설조사연구소

3) 분석방법: SPSS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으며, 분석목적에 따라 빈도(frequency) 분석, 백분율(percentage) 분석, 교차분석(crosstabulation) 방법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항목별 응답경향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응답경향을 분석.

IV. 분석결과

1. 경제전망 및 과제

- 일반국민은 향후 과제로서 물가상승을 억제하여 경제안정기조를 확립하고 부동산, 과소비,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여 형평과 복지를 도모하는 것을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정치사회불안을 해소함이 지속성장과 선진국으로의 발전에 필수적 선결과제로 지적하고 있어 정부는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과 함께 이러한 경제정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치,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는데 힘써야 할 것임.

1) 향후 10년간의 경제발전에 대한 전망

< 표 01 >

	지금까지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	지금까지와 비슷한 경제성장	다소둔화된 경제성장	성장부진으로 침체국면
<전체>	20.0	43.7	30.9	4.7
<hr/>				
<연령별>				
20대	19.6	41.4	35.2	3.8
30대	17.3	40.0	37.6	4.8
40대	14.7	47.5	29.9	7.2
50대이상	28.8	49.0	16.3	3.8
<hr/>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26.3	48.5	19.1	4.6
고졸	18.5	43.4	33.1	4.9
대재/졸이상	13.0	37.0	45.3	4.7

(계속)

(계속)

	지금까지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	지금까지와 비슷한 경제성장	다소둔화된 경제성장	성장부진으로 침체국면
<월소득수준별>				
30만원이하	26.7	50.0	18.2	4.5
31-50 만원	20.4	46.4	27.0	4.8
51-80 만원	19.3	43.3	32.4	4.2
81-150만원	17.7	40.6	35.7	5.9
151 만원이상	13.9	44.3	38.3	3.5
<직업별>				
농/ 어/ 임업	25.3	47.3	19.2	7.9
자영상공업	15.2	44.3	35.4	4.2
판매/ 기능직	21.4	41.9	29.0	6.7
사무/ 전문직	17.9	33.3	41.1	7.7
주 부	22.2	40.2	25.1	3.4
학 생	12.7	45.8	46.1	1.0

- 향후 10년간의 경제발전에 대한 전망은 지금까지와 비슷한 정도의 성장(43.7%)을 하거나 지금까지보다는 다소 둔화된 성장(30.9%)을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음.
- 연령별로 보면 20-30 대층에서 경제성장의 둔화를 전망한 비율이 높고 50대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우리경제가 보다 높은 고도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 비관적 견해가 높았으며, 직업별로는 농/ 어/ 임업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자영상공업, 사무/ 전문직, 그리고 학생은 우리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지속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2) 경제성장 둔화이유

< 표 02 >

	원유가격상승	노사분규	물가상승	국제경쟁력약화	정치·사회불안
<전 체>	8.0	5.0	17.6	33.5	34.0
<연령별>					
20대	6.2	3.1	16.6	38.9	33.2
30대	8.0	5.7	18.2	35.2	33.0
40대	10.7	5.8	16.5	29.1	34.0
50대이상	9.5	7.9	20.6	19.0	39.7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7.3	4.8	23.4	25.0	36.3
고 졸	9.1	5.0	20.2	29.8	35.1
대재/ 졸이상	7.1	5.3	9.5	45.0	30.8

- 우리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국제경쟁력약화 (33.5%)의 경제적 이유와 정치·사회불안 (34.0%)이 주요인으로 지적되었는데 특히 정치·사회적 요인이 성장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 경제가 경제외적 요인에 크게 영향받고 있다는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고 이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음.
-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제경쟁력약화의 경제적 요인을,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사회불안의 경제외적 요인을 우리경제의 성장둔화요인으로 들고 있어 좋은 대조를 보여줌.
- 노사분규, 원유가격상승 등은 비교적 낮은 응답만을 보였으며 특히 물가상승이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지적한 비율이 17.6% 나 되었는데 이는 물가상승이 과연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이 되는가 하는 질문과 상관없이 우리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 물가상승에 대하여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음을 잘 반영한다고 하겠음.

3) 1 년후의 무역수지 상태전망

< 표 03 >

무역수지 상태	백분율
상당한 흑자	1.9
소폭의 흑자	16.3
수출·수입이 비슷	31.5
소폭의 적자	37.7
상당한 적자	10.3

1 년후의 무역수지에 관해서는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48.0% 로 가장 많았고 흑자를 전망한 응답은 18.2% 로 비교적 낮았음.

4) 무역수지적자를 전망하는 이유

< 표 04 >

무역수지적자 전망이유	백분율
수입개방에 따른 수입급증	57.9
생산성부진	18.6
노사분규 및 임금상승	15.3
신흥공업국의 부상	3.8
기 타	2.5
무응답	1.9

이렇게 무역수지의 적자를 전망하는 이유로는 수입급증이 57.9% 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는 생산성부진 (18.6%), 노사분규 및 임금

상승 (15.3%), 그리고 신흥공업국의 부상 (3.8%) 등 수출부진 요인과 관련된 응답들 (합계 37.7%)보다도 월등히 높은 비율임. 이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이 수입개방에 따른 수입급증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됨.

5) 가장 심각한 경제 현안

< 표 05 >

심각한 경제현안	백분율
물가 상승	42.3
주택난 및 부동산투기	18.2
과소비	14.6
빈부격차	10.6
수입개방	4.9
수출부진	3.5
노사갈등	3.5
지역간 불균형	1.5
기타	0.5
모르겠다/ 무응답	0.3

우리나라 경제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2.3%가 물가상승을 지적하였으며, 18.2%는 주택 및 부동산투기현상을, 14.6%는 과소비현상을, 그리고 10.6%는 빈부격차를 지적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문제 중 물가상승을 무엇 보다도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국민은 물가상승외에도 주택난및 부동산투기, 과소비, 빈부격차 등과 같이 소득과 부의 차이에 따른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형평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냄.

6)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문

< 표 06 >

	기술개발 투자	수출시장 확대	기능인력 공급	금융세계 지원	기타 및 무응답
<전 체>	55.0	21.9	16.1	3.7	3.3
<hr/>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53.4	21.8	16.4	2.7	5.7
고 졸	51.3	24.1	18.0	4.7	1.9
대재/ 졸이상	64.5	17.8	12.1	3.6	2.1
<hr/>					
<직업별>					
농/ 어/ 임업	56.8	15.8	15.1	5.5	6.8
자영상공업	54.5	24.1	14.3	5.1	2.1
판매/ 기능직	55.2	20.5	19.5	2.4	2.4
사무/ 전문직	56.5	22.2	15.0	4.3	2.0
주 부	49.1	25.3	19.5	2.4	3.7
학 생	71.6	14.7	8.8	1.0	3.9

-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분야로서 응답자의 반수이상인 55%가 기술개발투자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출시장확대 (21.9%), 기능인력공급 (16.1%) 등을 꼽았음.
 - 교육수준별로 보았을 때 기술개발투자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대재 및 대졸이상의 학력에서 가장 많으며 (64.5%), 반면 수출시장확대 또는 기능인력공급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고졸이하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직업별로 보았을 때 기술개발투자에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하는 응답은 학생층에 가장 많으며(71.6%) 주부층에서 가장 적

게 나타났음(49.1%). 또한 수출시장확대, 기능인력공급, 금융세제지원 등을 주부와 학생을 제외한 직업계층별로 살펴보면 수출시장확대는 자영업상공업자에게, 기능인력공급은 판매기능직에게, 그리고 금융세제지원 은 농/림/어업계층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정책분야로 나타났음.

7) 바람직한 경제운영 방향

< 표 07 >

바람직한 경제운영방향	백분율
정책의 여론수렴성	35.1
정책의 부처간 일관성	32.1
정책의 지속성	18.1
정책의 적시성	12.6
기 타	0.6
모르겠다/ 무응답	1.5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을 수립할때 여론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5.1%가 정책을 수립할때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2.1%는 각 부처간의 정책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한다고 응답하였음. 이 외에도 응답자의 18.2%는 정책의 지속성을, 12.6%는 정책의 적시성을 꼽았음.

8) 향후 유망산업

< 표 08 >

	전기/ 전자	섬유	자동차	컴퓨터/ 반도체	건설	금융/ 보험	관광/ 레저	기타
<전 체>	9.9	2.0	6.0	59.4	8.1	3.1	8.7	
<hr/>								
< 연령별 >								
20 대	6.9	1.6	3.6	69.7	7.1	3.4	7.5	
30 대	8.2	2.7	6.7	58.3	6.5	2.7	13.5	
40 대	10.8	2.5	7.9	52.2	10.8	5.0	8.3	
50 대이상	16.3	1.3	7.1	51.0	9.6	1.6	4.8	

- 우리나라 국민은 향후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써 단연 컴퓨터/ 반도체분야를 손꼽으며 (59.4%), 그 다음으로 전기/ 전자 (9.9%), 관광/ 레저 (8.7%) 등을 전망함. 반면 경제개발초기단계의 주력산업이었던 섬유부문에 대해서는 전망이 좋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겨우 2% 에 불과하였음.
- 유망산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컴퓨터/ 반도체산업은 연령이 낮을수록 유망한 산업으로 대답한 응답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전기/ 전자 산업은 연령이 오히려 높을수록 그 응답자수가 증가하였음.

2. 물가에 관한 여론

- 물가안정은 국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증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첫번째 관심사임. 물가상승은 총수요증가에 의한 수요팽창인플레이션과 공급비용증가에 의한 비용상승인플레이션으로 구분되는 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부동산가격의 급등에 따른 비용상승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리의 확산에 있는 것으로 보임. 지가와 같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전월세에 대한 전가효과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물가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심리를 부추김으로써 전반적인 물가오름세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됨.

1) 1 년동안 가장 많이 오른 물가항목

< 표 09 >

(단위: %)

	농수 산품	공산품	서비스 요 금	공공 요금	주거비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17.7	11.2	11.2	3.5	55.2	0.3	0.9
<hr/>							
< 직업별 >							
농/ 어/ 임업	11.6	30.1	12.3	4.8	50.4	0.0	2.7
자영상공업	15.2	9.5	8.3	4.8	61.0	0.6	0.6
판매/ 기능직	20.5	7.1	10.0	3.8	56.7	0.5	1.4
사무/ 전문직	16.4	8.2	15.5	2.4	57.5	0.0	0.0
주 부	22.2	11.6	7.4	2.6	55.7	0.0	0.5
학 생	13.7	4.9	21.6	2.9	54.9	0.0	2.0

(계속)

(계속)

	농수 산품	공산품	서비스 요 금	공공 요금	주거비	기타	모름/ 무응답
< 월소득수준별 >							
30만원이하	13.6	24.4	11.4	3.4	42.6	0.0	4.5
30-50 만원	19.0	12.8	6.9	4.5	56.1	0.3	0.3
51-80 만원	18.2	9.8	10.9	3.6	56.9	0.4	0.2
80-150만원	18.2	7.6	12.6	3.0	58.1	0.2	0.2
151 만원이상	18.3	3.5	20.9	2.6	54.8	0.0	0.0
< 지역크기별 >							
대 도시	19.1	5.3	10.3	3.8	60.6	0.4	0.6
중소 도시	22.8	10.9	9.5	2.9	53.1	0.0	0.8
읍 / 면	10.6	22.0	14.4	3.5	47.5	0.2	1.7

- 지난 1 년동안 가장 많이 오른 물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반수 이상이 전월세값과 같은 주거비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답함. 즉, 응답자의 55.2 %가 전월세값과 같은 주거비의 상승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농수산품(17.7 %), 공산품(11.2 %), 서비스요금(11.2 %) 등을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지난 1년동안에 폭등한 전월세값과 가격등락이 심했던 농수산품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가계부담정도를 반영하는 결과로써 실제로 90년도 항목별 물가상승율을 살펴보면, 주거비, 농축산물, 서비스, 공산품의 순으로 큰 상승폭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순서는 대체로 위에서 본 응답자 구성비와 일치함.

[물가 및 지가]

1990 년 10 월말 현재

항 목	발표물가지수	응답자 구성비
농축산물	14.8	17.7
공산품	4.3	11.2
서비스(공공)	6.1	14.7
(개인)	13.5	
주거비	15.2*	55.2

* : 3/4 분기말 지가상승율을 표시함

자료: 경제기획원, 건설부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주거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되었다는 점에서는 응답자의 특성과 상관없이 대체로 공감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거비를 제외한 항목별 물가상승율을 직업별로 비교해 보면 각 직업계층은 대체로 그들의 지출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부문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생각함. 예컨대 농/ 어/ 임업과 같은 1차산업 종사자의 경우 공산품 가격의 상승에 대해 다른 직업 종사자보다 두드러지게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부는 농산품에 대해, 학생과 사무전문직의 경우는 서비스요금의 상승에 대해 다른 직종 종사자보다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월소득별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30만원 이하의 소득층의 경우 다른 소득층보다는 공산품가격의 상승에 보다 민감한 반면 주거비의 상승에는 오히려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산품가격상승에 대해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151 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다른 소득층에 비해 서비스요금의 상승에 대해 다른 소득층보다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응답자 거주지의 크기별로 살펴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주거비의 상승에 대해 보다 민감한 반면 공산품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훨씬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주거비가 도시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됨.

2) 1년전과 비교한 저축비율 증가 여부

< 표 10 >

(단위: %)

	늘었다	비슷하다	줄었다	저축없음	모름/ 무응답
< 전 체 >	14.1	42.8	42.0	0.6	0.5
< 연령별 >					
20 대	16.0	47.1	35.8	0.4	0.8
30 대	14.9	41.7	42.9	0.5	0.0
40 대	11.5	37.8	50.0	0.4	0.4
50 대이상	12.5	42.0	43.6	1.3	0.6
< 지역크기별 >					
대도시	11.7	42.7	45.3	0.0	0.3
서 울	9.5	41.5	48.7	0.0	0.3
중소도시	14.6	44.3	40.8	0.0	0.3
읍/ 면	18.1	41.6	37.1	2.2	1.0

- 1년전과 비교했을때 자신의 소득중에서 차지하는 저축의 비율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14.1%만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2.0%로 훨씬 크게 나타남. 한편, 응답자의 42.8%는 1년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음.

- 응답자를 지역크기 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 거주할 수록 소득에서 차지하는 저축율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소득지출중 주거비관련지출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큰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됨.
- 물가와 저축성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축성향의 감소가 물가상승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인지 혹은 사회전반적으로 만연된 과소비풍조와 이에 따른 저축성향의 감소가 물가상승을 부채질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움. 그러나 주거비상승율이 높은 대도시지역에서 저축율이 줄었다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때 적어도 주거비상승율과 이로 인한 물가상승이 저축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지역별 지가상승율]

전체평균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15.2	18.5	13.35	9.11

자료: 건설부 지가동향

3) 정부가 노력해야 할 물가안정 정책

< 표 11 >

(단위 : %)

	재정금융 긴축운영	공공요금 인상억제	부동산 투기억제	부족물품 수입증대	임금상승 억제	기 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15.1	14.7	52.5	2.4	11.8	1.9	1.7
15만원이상	17.2	10.9	46.9	3.1	10.9	6.3	4.7

-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부동산투기억제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물가안정시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2.5%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재정금융정책의 긴축적 운영(15.1%), 공공요금의 상승억제(14.7%), 그리고 임금상승의 억제(11.8%)를 꼽음.
-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부동산투기가 물가안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에 비해 재정금융긴축운영이나 임금상승억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것은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이 결국 부동산가격상승에 의해 출발된 비용상승인플레이션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함.

3. 주택에 대한 여론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화와 인구의 도시집중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켜 왔음. 주택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6공화국의 공약사업인 주택 200만호 건설과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도시영세민과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계획에 기초하고 있음. 이러한 계획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음.

1) 200 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성공여부

< 표 12 >

(단위 : %)

	잘 진행 될 것	대체로 잘 진행될것	잘 진행 되지못할것	전혀 진행되지 못할것	모름/ 무응답
< 전 체 >	15.1	53.2	27.5	2.4	1.7
<hr/>					
< 주택소유형태별 >					
자 가	15.5	54.7	25.5	2.1	2.1
전 세	15.8	52.7	28.4	2.1	1.0
월 세	12.1	46.7	35.2	4.5	1.5

- 국민들은 정부의 200 만호 건설계획이 약간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응답자의 68.3% 가 약간의 차질은 있겠지만 대체로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응답자의 29.9% 만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응답은 교육수준,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일관됨. 그러나 주택소유별로 보았을 때는 대체로 전월세거주자 일수록 자기소유자에 비해 정부의 주택건설정책의 성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200 만호 주택건설후 주택구입의 용이성평가

< 표 13 >

주택구입 용이성평가	백분율
현재보다 더 쉬워질 것이다	27.3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51.0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17.8
기 타	0.1
모름/ 무응답	3.7

- 그러나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정부의 계획대로 200만호 주택건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집마련기회가 지금보다 크게 쉬워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92년까지 200만호의 주택을 건설을 할 경우 지금보다 어느정도 내집마련기회가 더 쉬어질 것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7.3 %정도가 현재보다 더 쉬워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비해 51.0%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17.8%는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3) 임대주택건설의 저소득층 주택난해결여부

< 표 14 >

(단위: %)

	많은 도움이 될 것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	별로 도움이 못될 것	전혀 도움이 못될 것	모름/ 무응답
< 전 체 >	13.5	48.8	28.1	4.6	5.1

(계속)

(계속)

	많은 도움이 될것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	별로 도움이 못될것	전혀 도움이 못될것	모름/ 무응답
< 연령별 >					
20 대	9.7	49.3	32.7	5.1	0.2
30 대	15.2	45.8	30.6	4.1	4.3
40 대	15.5	50.5	24.1	6.1	3.6
50 대이상	15.4	50.3	20.8	3.2	0.3
< 지역크기별 >					
대 도시	13.1	48.5	29.8	6.1	2.5
중소 도시	14.3	50.4	25.2	4.0	6.1
읍 / 면	13.4	47.8	27.7	2.5	8.7

-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정부의 임대주택건설이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택건설 계획중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기대가 비교적 큰 것으로 보임. 임대주택건설이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2.3%가 상당히 혹은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2.7%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우선 연령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들이, 지역크기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자보다는 읍면, 또는 중소도시거주자가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남.

4) 중산층 무주택가구의 내집마련 기간

< 표 15 >

(단위: %)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0년이상	평 생	모름/ 무응답
< 전 체 >	8.9	49.6	19.7	13.8	4.1	1.5	2.5
<hr/>							
< 결혼여부별>							
기 혼	8.2	48.6	20.3	15.1	3.6	1.6	2.6
미 혼	11.2	52.7	17.6	9.4	5.6	1.5	2.1
<hr/>							
< 주택소유형태별>							
자 가	9.0	61.1	18.3	13.9	3.7	1.2	2.7
전 세	9.8	49.3	17.6	14.2	5.2	1.8	2.1
월 세	6.5	44.2	27.6	14.1	3.5	2.0	2.0

- 우리나라국민들은 신혼부부가 자기집을 장만하는데 평균 15.3년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장 응답자가 많은 했수는 6-10년 사이로 전체응답자의 약 49.6%를 차지함.
 - 이를 응답자의 결혼유무별로 살펴보면 6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기혼자의 경우 48.6%인데 비해 미혼자의 경우 52.7%로 나타나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가 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택소유형태별로 살펴보면, 자가주택 거주자의 경우 내집마련에 6-10년정도 걸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61.1%인 반면 전세거주자는 연49.3%, 월세거주자는 연 44.2%를 차지하고 있어 전월세거주자는 내집마련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5)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견해

< 표 16 >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견해	백분율
주택공급을 늘이기 위해 모든주택의 분양가를 자율화해야 한다.....	7.8
집값안정과 주택마련기회 확대를 위해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	64.1
중대형 아파트는 자율화하고 소형아파트의 분양가능 규제해야한다.....	22.7
기 타	0.6

아파트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케 하는 분양가 자율화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4.1%가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2.7%는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는 자율화하되 소형아파트의 분양가는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함. 결국 어떠한 형태에든 집값안정과 주택마련기회의 확대를 위해 아파트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 압도적임.

- 반면 분양가의 자율화는 건설업체의 경쟁적인 주택건설이라는 장점에도 구하고 소득, 직업계층을 막론하여 7.8%라는 극히 낮은 정도의 공감을 받는데 그침.

4. 부동산문제에 관한 여론

- 정부는 90년 초의 지가급등과 이에 따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4.13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수립, 발표했는데, 이는 탈법적 투기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등기의무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정부는 세제를 통하여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것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확보와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형평과세원칙이라는 조세이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토지세제를 수립, 시행하였음. 종합토지세제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투기억제책 정도로만 생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이를 모르고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때 국민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1년후 거주지 지가상승폭

< 표 17 >

거주지 지가상승폭	백분율
10 % 이하	31.0
11 - 20 %	22.1
21 - 30 %	11.9
31 - 50 %	9.9
50 % 이상	5.1

- 현재 살고있는 지역의 땅값이 1년 후에 몇 % 정도 오를 것이라고 보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응답자의 31.0%가 현재보다 10% 이내에서 오를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응답자의 34.0%는 11-30%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함. 그리고 31% 이상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15%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지가안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여전히 상당한 지가상승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됨.

2) 미등기전매의 형사적 처벌과
 상승부동산투기자 명단의 언론공개가
부동산투기억제에 주는 효과

< 표 18 >

(단위: %)

부동산투기억제 효과	미등기전매의 처벌	투기자명단의 공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1.9	21.3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44.9	42.0
별로 도움이 못될 것이다	23.1	26.8
전혀 도움이 못될 것이다	4.1	5.8
기 타	0.2	0.1
모름/ 무응답	5.7	4.5

우리국민들은 미등기전매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나 상승부동산투기자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컨대 미등기전매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시행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66.8%가 많이 혹은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상승부동산투기자명단공개에 대해서도 63.3%가 도움이 된다고 답함.

3) 종합토지과세제도에 대한 인지정도

< 표 19 >

(단위: %)

	자세히 알고있다	조금 알고있다	모르고 있다
< 전 체 >	5.3	43.9	50.7
< 월소득수준별 >			
30 만원 이하	5.7	30.7	63.6
31-50 만원	2.4	41.2	56.4
51-80 만원	6.7	42.7	50.7
81-150 만원	6.7	50.5	42.9
151 만원 이상	5.2	52.2	42.6

- 종합토지과세제도란 더면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토지를 더해서 토지의 규모에 따라 많이 갖고 있을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누진과세제도임. 최근에 발표된 종합토지세의 내용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응답자의 49.2%가 자세히 혹은 조금 알고있다고 응답한 반면, 50.7%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소득수준별로 보았을때 응답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종합토지세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종합토지과세제도의 부동산투기 진정효과 기대

< 표 20 >

(단위: %)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어느정도 도움이 될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16.7	46.6	23.5	3.9	0.1	9.3
< 월소득수준별 >						
30만원 이하	11.9	43.2	19.3	5.7	0.0	19.9
31-50 만원	15.2	46.7	22.5	3.1	0.0	12.5
51-80 만원	19.1	46.0	23.8	3.1	0.2	7.8
81-150 만원	18.2	48.0	25.9	2.7	0.0	5.2
151 만원이상	13.9	46.1	25.2	11.3	0.0	3.5

-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로 종합토지과세제도가 미등기전매의 처벌이나 투기자명단공개와 같은 투기억제정책과 같이 부동산투기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종합토지과세제도의 투기억제효과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63.5%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27.4%는 별로 혹은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 특히 종합토지과세제도의 부동산투기 억제효과에 대한 기대는 월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보다 긍정적인 반면, 151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는 오히려 다른 소득층에 비해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5. 노사문제에 대한 견해

- 올해들어 노사분규는 작년에 비해 20%로 줄어들고 임금인상타결 진도율도 93.9 %로 높아졌음. 이것은 일단은 87년과 88년의 과격한 노사분규의 현상이 89년부터 90년에 이어 계속 가라앉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경제위기의식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의 고려와 89년 17.9%, 90년 9.1%로 나타나는 임금상승에 따른 실질적 소득증대라는 양면이 노사분규감소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감소와 제품불량의 급증등 새로운 경제문제로 대두한 노동의 질적 감퇴현상은 결국 노동자들의 근로의식 약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높음.

1) 노사분규 감소원인

< 표 21 >

(단위: %)

	임금 인상	기업가의 노조호의	합법적 노조활동	엄격한 법적용	경제위기 의식	기 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21.9	21.6	16.1	14.3	22.9	1.5	1.7
.....							
< 연 령 별 >							
20 대	17.6	21.4	19.6	16.6	22.8	1.6	0.4
30 대	17.8	24.8	14.9	12.8	28.2	1.0	0.5
40 대	23.0	21.9	14.4	12.6	24.5	1.8	1.8
50 대이상	33.0	17.3	13.5	14.4	14.7	1.9	5.1
.....							
< 교육수준별 >							
중졸이하	31.1	18.1	10.9	16.8	16.8	2.1	4.2
고 졸	19.6	27.3	16.6	12.5	22.7	.8	0.5
대재/ 졸이상	11.8	16.3	23.1	13.9	32.8	2.1	0.0

(계속)

(계속)

	임금 인상	기업가의 노조호의	합법적 노조활동	엄격한 법적용	경제위기 의식	기 타	모름/ 무응답
< 직 업 별 >							
농/ 어/ 임업	36.2	17.1	10.3	20.5	11.0	1.4	3.4
자영상공업	22.9	21.1	16.4	10.7	25.3	1.8	1.8
판매/ 기능직	17.6	23.8	15.7	15.7	24.3	2.4	0.5
사무/ 전문직	12.6	21.3	14.0	16.9	31.9	2.4	1.0
주 부	23.0	25.1	15.0	12.7	20.8	1.1	2.4
학 생	12.7	14.7	30.4	13.7	27.5	1.0	0.0
< 월소득수준별 >							
30만원이하	35.8	15.9	9.1	21.6	11.4	1.1	5.1
31-50 만원	23.9	23.9	17.3	13.8	18.7	1.0	1.4
51-80 만원	21.6	24.4	14.7	14.0	22.7	1.3	1.3
81-150만원	16.5	22.2	17.5	11.3	29.6	2.0	1.0
151 만원이상	13.9	14.8	23.5	13.0	30.4	3.5	0.9

- 노사분규는 올해 12월 12일 기준으로 318건이 발생하여 작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1598건에 비해 80%의 급격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올해의 노사분규의 감소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이유보다는 경제위기의식이나 기업가의 노조에 대한 호의등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임금인상이라는 실질적인 혜택도 가미되는 등 다분히 복합적인 성격이 많은 것으로 보임. 금년의 노사분규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9%가 전반적인 경제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임금인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21.9%), 기업가가 노조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하는 풍토가 조성되었기 때문(21.6%)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정부의 엄격한 법적용이나 합법적 노조활동 경향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응답율이 낮게 나타났음.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별로 응답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경제위기 의식을 주요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임금인상을 주요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임.
- 직업별로 볼때 농/ 어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주부의 경우는 경제 위기의식 보다는 임금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학생층의 경우 노조활동이 합법적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진데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2) 근로자들의 요구사항

< 표 22 >

(단위: %)

	임금수준 인상	작업환경 개선	인간적인 대우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경영인사 참여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39.1	16.8	39.5	1.6	2.1	0.5	0.4
<hr/>							
< 교육수준별 >							
중졸이하	39.7	14.5	42.0	1.1	1.1	0.6	1.0
고 졸	37.9	17.9	39.8	1.4	2.4	0.5	0.2
대재/ 졸이상	40.2	18.3	34.9	2.7	3.3	0.6	0.0
<hr/>							
< 월소득수준별 >							
30만원이하	42.0	14.2	40.3	1.1	1.1	0.6	0.6
31-50 만원	34.6	21.5	40.1	2.1	1.0	0.3	0.3
51-80 만원	39.3	13.6	42.0	1.1	3.1	0.4	0.4
81-150만원	38.4	18.2	38.9	2.5	1.5	0.5	0.0
151 만원이상	49.6	17.4	30.4	0.9	1.7	0.0	0.0

-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39.5%가 인간적인 대우를 가장 바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9.1%는 임금수준의 향상을 가장 바라고 있다고 응답 하였음. 인간적인 대우와 임금수준 인상이 동등한 비율로 근로자들의 중요 요구사항으로 인식된 것은 국민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이 보다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대우의 중요성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인격적 대우의 중요성을 더 강조함.
- 교육수준, 소득수준별로 보았을때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인간적인 대우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남. 이는 저소득계층일수록 형평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됨.

3) 근로자의 근로의식약화 주장에 대한 견해

< 표 23 >

(단위: %)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모름/ 무응답
< 전 체 >	53.5	45.7	0.9
< 연 령 별 >			
20 대	58.6	40.2	1.2
30 대	55.2	44.3	0.5
40 대	53.6	46.4	0.0
50대이상	42.9	55.4	1.6
< 교육수준별 >			
중졸 이하	43.1	55.9	1.0
고 졸	56.1	43.1	0.8
대재/ 졸이상	64.5	34.6	0.9

(계속)

(계속)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모름/ 무응답
< 직 업 별 >			
농/ 어/ 임업	44.5	54.8	0.7
자영상공업	55.1	44.3	0.6
판매/ 기능직	53.8	45.2	1.0
사무/ 전문직	63.3	35.7	1.0
주 부	47.8	51.2	1.1
학 생	62.7	36.3	1.0
무직/ 기타	52.5	46.7	0.8
< 월소득수준별 >			
30만원 이하	41.5	57.4	1.1
31-50 만원	50.2	48.8	1.0
51-80 만원	52.4	46.7	0.9
81-150 만원	58.6	40.9	0.5
151 만원 이상	67.8	31.3	0.9

- 근로자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를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5%는 동의를 한다고 응답, 우리나라 국민의 반수 이상이 근로자들의 근로의식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으로 나타남.
 -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근로의식약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사무전문직 종사자와 학생층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동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자의 근로의식약화 현상에 대해 국민들의 과반수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경제침체와 위기를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로서 국민적 공감정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줌. 특히 20 대의 젊은 층과 대학생들이 높은 동의정도를 보여준 것은 특기할 만함.

4) 근로자의 근로의식약화 원인

< 표 24 >

(단위: %)

	소득수준 향상으로 힘든일기피	주택가격 지나친상승	물가의 급속한 상승	사치성 소비에 따른 위화감조성	기업가의 기업의욕 부진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31.5	11.0	22.4	27.2	3.0	3.0	1.9
< 월소득수준별 >							
30만원이하	26.0	1.4	30.1	31.5	5.5	2.7	2.7
31-50 만원	33.1	13.1	19.3	29.7	.7	2.1	2.1
51-80 만원	32.2	14.0	22.5	25.8	3.0	1.7	.8
81-150만원	30.7	10.1	21.4	28.2	4.6	3.4	1.7
151 만원이상	32.1	6.4	25.6	23.1	1.3	7.7	3.8
< 주택소유형태별 >							
자 가	36.1	7.3	21.8	26.7	4.1	2.4	1.7
전 세	25.1	16.3	22.3	27.4	1.9	4.7	2.3
월 세	23.8	18.1	24.8	28.6	1.0	2.9	1.0

- 특히 근로자의 근로의식이 약화되었다고 보는 국민들 중에는 그 원인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힘든일을 기피하기 때문(31.5%) 이라고 보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치성 소비풍조로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되었기 때문(27.2%) 으로 보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소득수준이 30 만원 이하인 경우 물가의 급속한 상승을 근로의식약화의 원인으로 지적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물가변동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일면을 엿볼 수 있으며, 주택소유형태별로 볼때 전월세거주자들이 자가소유자보다 근로의식약화의 원인으로 주택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지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자의 근로의식 약화를 기본적으로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경제발전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며, 사치성 풍조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에 대한 지적이 많은 것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풍조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6.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견해

- UR에 대한 인지율은 크게 높아서 국가적인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UR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장래의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와 위기의식을 고조시켜온 언론보도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남.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UR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농업인구를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우루과이라운드 인지 여부

< 표 25 >

(단위: %)

	들어본적있다	들어본적없다
< 전 체 >	82.0	18.0
< 연 령 별 >		
20 대	93.1	6.9
30 대	88.4	11.6
40 대	75.2	24.8
50대이상	61.9	38.1

(계속)

(계속)

	들어본적있다	들어본적없다
< 직 업 별 >		
농/ 어/ 임업	69.2	30.8
자영상공업	87.2	12.8
판매/ 기능직	81.9	18.1
사무/ 전문직	96.6	3.4
주 부	72.6	27.4
학 생	98.0	2.0
< 월소득수준별 >		
30만원 이하	64.8	35.2
31-50 만원	76.8	23.2
51-80 만원	84.2	15.8
81-150 만원	89.7	10.3
151 만원이상	94.8	5.2
< 지역크기별 >		
대 도 시	85.0	15.0
중소 도시	83.6	16.4
읍 / 면	75.2	24.8

- 90년대초부터 최대의 경제현안으로 부각된 UR협상은 그동안 언론의 줄기찬 보도와 토론으로 초미의 관심사였음. 우르콰이라운드 협상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82.0%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월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읍면, 혹은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보다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르콰이라운드협상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음.

- 직업별로는 사무직, 전문직 종사자와 학생들의 95% 이상이 이 협상에 대해 알고 있어 인지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농어민과 주부층의 경우 70% 내외가 이 협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인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2) 우르과이라운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표 26 >

(단위: %)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것	지금보다 약간 나아질것	지금과 별차이 없을것	지금보다 약간 못할것	지금보다 훨씬 못할것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2.2	11.1	21.5	36.6	27.7	0.1	0.8
.....							
< 직 업 별 >							
농/ 어/ 임업	5.9	4.0	14.9	27.7	46.5	0.0	1.0
자영상공업	2.4	13.7	21.8	37.5	24.2	0.0	0.3
판매/ 기능직	2.3	9.3	27.9	34.3	23.8	0.0	2.3
사무/ 전문직	1.5	13.0	18.5	36.5	30.5	0.0	0.0
주 부	1.8	12.7	26.5	37.8	20.4	0.0	0.7
학 생	1.0	9.0	10.0	40.0	39.0	0.0	1.0
무직/ 기타	1.1	6.7	20.2	40.4	29.2	1.1	1.1
.....							
< 지역크기별 >							
대 도시	1.6	13.4	22.3	38.6	23.4	0.0	0.7
중소 도시	1.6	10.2	22.9	35.2	28.6	0.3	1.3
읍 / 면	3.9	7.2	18.8	33.9	35.5	0.0	0.7

-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봄. 농산물 및 서비스 등의 교역자유화 문제를 포함한 무역문제를 다루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64.3%가 지금보다 더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3%에 불과하였음.
 - 직업별로 볼때, 이 협상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학생층의 경우 79%가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으며 농/어/임업 종사자도 74.2%가 부정적인 전망을 하여 다른 직업 종사자들보다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볼때에도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62%가 부정적인 전망을 한 반면 읍면지역 거주자의 경우 69.4%가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어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이하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비관적인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UR에 대한 정부의 홍보노력과 최근 언론의 진지한 UR협상진전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UR은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정부의 홍보활동이 미약했던데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언론의 UR에 대한 기본보도방향이 우려나 위기의식 고조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나 UR의 긍정적 부정적 면에 대한 균형적인 보도의 비율이 극히 낮았고, 처음부터 UR을 농촌문제에 지나친 초점을 맞추고 보도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3) 농업발전을 위한 방향

< 표 27 >

(단위 : %)

	수출용 품 종 작물로의 전 환	농지의 대규모 소유 및 전문화	농공단지 조성으로 농외소득 증대	농업인구의 다 른 산업으로의 전 환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29.4	24.4	35.4	6.9	1.5	2.3
< 직 업 별 >						
농/ 어/ 임업	24.8	17.8	38.6	9.9	4.0	5.0
자영상공업	30.0	25.9	34.8	6.9	1.4	1.4
판매/ 기능직	31.4	25.0	33.1	8.1	0.0	2.3
사무/ 전문직	30.5	24.5	34.5	6.0	3.0	1.5
주 부	29.5	24.4	37.1	5.8	0.7	2.5
학 생	28.0	27.0	32.0	9.0	3.0	1.0

-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농업의 충격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농업발전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5.4%가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방안을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수출용 특용작물로의 전환방안(29.4%), 농지의 대규모 소유 및 전문화방안(24.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농/ 어/ 임업 종사자의 경우 다른 직업종사자보다 농공단지조성방안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UR협상의 충격과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 농업부문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어떤 뚜렷한 방향이 여론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아무리 UR이 영향이 크더라도 현재의 농업인구를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는 등 농촌을 포기하는 식의 해결방안에는 지지정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UR충격의 해결을 위한 내부적 방안강구에 기대를 걸고있는 것으로 해석됨.

V. 요약 및 결론

- 국민들은 물가문제, UR문제 등 우리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속해 온 경제성장율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성장율을 보일 것이라고 비교적 밝은 전망을 하고 있음.
 - 현재로서 가장 심각한 경제현안으로는 단연 물가상승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는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정치사회의 불안을 많이 들고 있으며, 앞으로 경제정책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 여론수렴과 부처간 정책의 일관성유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함.
 - 근년들어 올해 처음으로 적자를 보인 무역수지는 내년에는 소폭의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이러한 무역수지의 적자가 수입 개방에 따른 수입급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기술개발투자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향후 컴퓨터와 반도체산업이 가장 유망하리라고 보고 있음.
-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물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거비상승에서 가장 심각하며,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도 부동산투기억제를 최우선으로 꼽을 정도로 주거비용의 급등에 대한 불안이 큼.
- 정부가 추진중인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대체로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내집마련기회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큼 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건설사업이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큼.

- 경쟁적인 주택건설이라는 분양가 자율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가 아파트분양가의 자율화보다는 정부에 의한 규제를 원하고 있다.
-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여전히 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이다라는 예상 하나, 그 상승폭은 작년이나 올해와는 다른 10%이하 혹은 올라도 20%미만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예년과 같은 폭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
- 미등기전매에 대한 형사처벌과 상습부동산 투기자 명단의 언론공개 등지가완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효과성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있다.
 - 정부의 세제를 통한 토지과다보유 억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종합토지과세제도에 대해서 알고있는 사람들은 그 효과성에 대해 기대를 거는 경우가 많으나, 아직 국민들의 과반수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 정부의 홍보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올해들어 급격히 줄어든 노사분규 수와 임금인상타결 진도율의 향상 등 노사관계의 안정은 경제위기의식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고려와 임금인상에 의한 실질적 소득증대라는 양면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생산성감소 등 새로운 경제문제로 대두된 노동의 질적 감퇴현상은 결국 노동자의 근로의식약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여론이 높음.
- 노동자들은 인간적인 대우와 임금수준의 향상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중요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이 보다 인간적인 대우를 중요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
 - 근로자들의 근로의식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고 있다. 특히, 그러한 근로의식약화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힘든 일을 기피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가장 우세하며, 또한 사치성 소비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과 물가의 급속한 상승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UR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비록 저소득층, 저학력층, 노년층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으며, UR에 의한 국내시장의 개방이 결국은 우리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UR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인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농업인구를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현 상태에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UR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처음부터 농촌문제에 보도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경제에 대한 우려와 위기의식을 고조시킨 언론보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또한 UR의 정확한 상황과 전망 및 대처방안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